

Ⅲ. 감사 결과

□ 총괄

○ 감사결과 총 99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명, 원)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기관주의	통보	권고
99	6	1 (1)	30	56	6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개별 처분사항 일람표>

연번	조치부서	제 목	처분사항
1	해경청 동해·서해·제주지방청장	■ 공무상 취급 현금 등 수납관리 체계 미흡	통보 6 기관주의 1
2	해경청 중부·서해·제주지방청장 군산·목포·여수·완도·울진·통영· 포항해경서장, 중특단장	■ 초과근무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방안 실효성 부족	통보 1 기관주의 11
3	해경청 서해지방청장 14개 관서장 서해지방청장·군산·목포·완도 해경서장 전 소속기관 30개 관서장	■ 계약관련 기본업무 불철저 - 직접생산 결격업체, 수의계약체결 - 최종 하자검사 등 미실시 - 적정 시중가격 조사업무 불철저	권고 1 통보 14 통보 4 통보 30
4	해경청 통영·평택·보령·울진·포항· 속초해경서장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및 확인 미흡	권고 1 경고 1, 시정 6 회수(2,814,240원) 추급(4,055,608원)
5	해경청	■ 휴대형 무선통신기(위키토키) 관리 미흡	통보 1
6	해경청	■ 해양오염사고 대응 유(油)처리제 관리체계 미흡	권고 1
7	해경청	■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검사 등 관리 미흡	권고 1
8	해경청 서해지방청장 등 13개 관서장	■ 피의자 호송 계획수립 기준 및 운영 미흡	권고 1 기관주의 13
9	해경청 중부·서해·남해·동해·제주지방청장	■ 민간잠수사 관리위원회 미개최 등 관리 미흡	권고 1 기관주의 5

□ 주요 지적사항: 9건

1. 공무상 취급 현금 등 수납관리 체계 미흡

- (판단기준) 「국고금관리법」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국고금을 관련 법령과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규정

해경청 소관 각종 면허 발급, 이용료, 시험응시 수수료 등 징수 근거

❶	수상레저조종면허 응시·(재)발급·갱신 수수료.....	「수상레저안전법」
❷	수련원(숙영관) 이용료.....	「해양경찰청 수련원 운영규칙」
❸	방제자재 형식승인·검정 수수료.....	「해양환경관리법」
❹	수상구조사자격 응시·발급 수수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❺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응시 수수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관리체계 미흡) 업무수행 중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 등 해양경찰 공무 수행 관련 최근 3년간의 실태점검 결과, 외부인 대상 각종 수납금 (계 XX.X억원 中 현금 X.X억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규정 미준수 등 국고금 부적정 관리

최근 3년간(2021~2023년) 공무상 취급 기능별 수수료 및 이용료 수납 현황

구 분	총 건수	수납액(원)		관련부서
		계	현금수납액(원)	
계	XXX,XXX	X,XXX,XXX,XXX	XXX,XXX,XXX	
❶ 수상레저조종면허(수수료)	XXX,XXX	XXX,XXX,XXX	XXX,XXX,XXX	○○○○과
❷ 수련원·숙영관(이용료)	XXX,XXX	XXX,XXX,XXX	XXX,XXX,XXX	○○○○과
❸ 방제자재 형식승인, 검정(수수료)	XXX	XXX,XXX,XXX	전액 계좌이체	○○○○과
❹ 수상구조사 자격(수수료)	X,XXX	XXX,XXX,XXX	전액 계좌이체	○○○○과
❺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수수료)	XX,XXX	XXX,XXX,XXX	용역업체로부터 수령	○○○○담당관

※ 공통사항 : 공용계좌 입금 이후 중복·오류·취소 등의 사유로 민원인 요청에 의해 환불 하는 절차 임의운영(업무담당자 임의출금)등으로 현금수납 검증 한계

□ (조치사항)

□□□□국장(○○○○과장, ◇◇◇◇과장)은 수상레저조종면허와 수상 구조사자격 관련 수수료 납부체계와 실태를 재점검·검증하고 매 회계연도 통계가 일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수납기준 체계를 마련(통보)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숙영관) 이용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납할 경우 장부관리 및 정해진 기한내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철저히 하는 한편, 현금수납 비율이 감소하도록 조속히 카드단말기 도입 조치(통보)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 이용관련 효율적 수납관리 방안을 마련 하는 한편, 수련원 이용자로부터 업무담당자가 현금을 개인계좌로 직접 수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기관주의)

☆☆☆☆국장(★★★★과장)은 민원신청 이전에 수수료를 선납받는 경우와 실제 형식승인·검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법정처리기한(5일~6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방안과 형식 승인·검정 취소사유로 민원인에게 수수료 반납 시 명확한 절차 마련(통보)

●●●●관(○○○○담당관)은 매년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각 응시 차수별 수납한 응시수수료가 시중은행에 일정기간 보관되어 발생한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국고 수입조치하는 방안 마련(통보)

2. 초과근무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방안 실효성 부족

「2024년 해양경찰청장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1호」

- ✓ 업정처리(사회적 비난가능성 높은 비위)
-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엄단
-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 국민침해형 비위 근절
- ✓ 의무위반 행위 엄금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복무위반”

□ (판단기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는 등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규정

○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무·관리업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등 조치하도록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09. 3. 1. 시행 (인사혁신처)

- 고의적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 행위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 (초과근무수당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포함 → 고의적 위반행위 명확화)

- 고의적 위반자 : 부정수령 전액 환수 + 5배 추가 가산금 징수

-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적발 → 기간) : 1회 → 6개월, 2회 이상 → 12개월

※ 개정 전(1회 → 3개월, 2회 → 6개월, 3회 → 12개월)

- '24. 1. 19. 개정시행으로 초과근무 부정수령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후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 시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할 수 있고, 2회('24. 1. 19. 이전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

□ (문제점)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도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부서 발령으로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 상실

□ (문제발생 원인)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 관서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후 관리실태 확인결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초과근무명령권자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복무담당부서에서 이와 관련 명확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 특히, 인사담당부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로 처분받은 자를 초과근무 명령금지기간 중 현업부서로 발령

※ 현업부서와 비현업부서간 인사발령이 잦은 기관운영 특성(해경청, 소방청, 경찰청 등)상 제재조치 불가능,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인사혁신처 의견)

- 현업부서 근무자는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피하는 등 강화대책의 실효성 상실 원인 제공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고의적 위반자)는 초과근무명령 금지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초과근무가 기본근무에 필연적인 부서(현업부서)로 인사발령 제한 방안 등 검토 필요

□ (조치사항)

☆☆·★★·○○지방해양경찰청 및 ●●·◎◎·◇◇·◆◆·□□·■ ■·
△△해양경찰서장, ▲▲단장은 앞으로 초과근무 부정수령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초과근무 관리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미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철저(기관주의)

▽▽▽▽과장은 ▼▼담당관 및 ◁◁팀장 등과 협의하여 초과근무 부정수령행위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초과근무명령 금지기간 지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재발방지방안 마련(통보)

3. 계약관련 기본업무 처리 미흡

① 직접생산 결격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판단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문제점) ◀◀해경서 등 총 14개 관서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1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미확인, 직접생산 결격업체와 수의계약 체결(XX건, X.X억원)

(문제발생 원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고시(‘09년 제도 시행)함에도 일선 계약담당 업무미숙으로 확인 누락

(조치사항) ▷▷해양경찰서장 등 14개 관서장은 계약상대자와의 직접생산여부 확인 등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 마련(통보 14)

② 최종 하자검사 등 계약 사후관리 미흡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및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3조의2 등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 하자검사와 별개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문제점)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하자검사 및 하자만료기한 도래 시 최종 하자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정기검사 X건 및 최종 하자검사 XX건 누락

※ 하자검사 누락대상 중 하자담보기간 종료 이후 6개월내 총 X건 XX,XXX,XXX원 예산 투입 보수공사 실시 ⇨ 해당 공사가 하자담보기간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를 보수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현시점 확인 곤란

(문제발생 원인)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정기 하자검사업무를 위임 하여 실시, 최종하자검사 절차에 대한 업무미숙 등 하자검사 실시 미흡

(조치사항) ☆☆지방해양경찰청장 등 4개 관서장은 공사 하자검사업무 철저(통보 4)

③ 적정 시중가격 조사업무 처리절차 미흡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0조 등에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지만,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은 의무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

- ✓ 예정가격 작성하지 않는 계약 :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및 2천만 원~5천만 원 (여성·장애인기업 등)의 수의계약

그리고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물가 조사복명서(기초가격 조사자료)를 작성하여 시장가격조사를 하여야 함

➡ 재무관의 예정가격 작성(결정) 생략만 가능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1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실례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 가격, 조달청장이 게재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을 비교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기초가격 조사자료를 작성한다.

(문제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및 5천만 원 미만 여성·장애인 기업 등)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격조사(기초금액 산정조서 등) 절차를 거쳐 정당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부서에서 조사한 가격(견적서)만을 믿고 **별도 시중가격조사 없이** 계획금액(예산)으로 계약 체결, 예산절감노력 부족

(문제발생 원인) 사업부서로부터 계약체결 지연에 대한 책임부담(특정 규격·업체 강요) 및 전가 우려, 해양경찰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 계약교육 부재

※ 사업부서 규격 선정의 미흡한 검토과정과 그에 따른 특정업체 선정 등과 계약 업무담당자의 경험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조치사항) ★★★★★과장 등 30개 관서장은 수의계약체결을 위한 물가 조사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철저(통보)

★★★★★과장은 계약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 회계 관련 적정한 교육이행 방안 마련(권고)

4.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및 확인 미흡

- (판단기준)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및 별표 1(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

- 정년잔여기간이 10년 초과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퇴직 당시 월봉급액 기준 → 퇴직월의 호봉에 맞는 월봉급액으로 산정

- (문제점) ❶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나 정년잔여기간 대로 산정

※ ○○해경서 경감 J의 정년잔여기간이 10년 4월로 10년을 초과하므로 명예퇴직수당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을 10년으로 계산해야하나 10년 4월로 계산, X,XXX,XXX원 과지급

② 명예퇴직월에 호봉승급을 하는 경우 월봉급액이 변경되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도 변경되어야 하나 정확한 호봉 확인 미흡

※ ●●해경서 경위 K 등 6명의 명예퇴직수당 계산 시 퇴직 월 호봉승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호봉 승급 전 월봉급액으로 명예퇴직수당을 계산, 합계 X,XXX,XXX원 적게 지급

□ (문제발생 원인) ① 담당자의 관련규정 숙지 미흡, ② 명예퇴직자의 호봉승급 여부 및 명예퇴직수당 배정 시 산정 결과와 비교 확인 미흡

□ (조치사항)

♣♣♣♣ 관(☉☉담당관)은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담당자 교육 및 예산 재배정 시 확인 등 재발방지 방안 마련(권고)

◆◆해양경찰서장은 명예퇴직수당 과지급액 X,XXX,XXX원 회수(시정) 및 명예퇴직수당 관련 담당자 1명 '경고' 처분

●●해양경찰서장 등 5개 해경서장은 명예퇴직수당 오지급액 총 X,XXX,XXX원 추급(시정)

5. 휴대용 무선통신기(워키토키) 관리 미흡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조 등 및 「전파법」 제18조의6 등에 워키토키(Walkie-Talkie)는 항무(해상)용·업무용·공공용(해상치안용·해경전용)으로 구분되며,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워키토키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시스템 등에 등재·관리하도록 규정

□ (문제점) ① 워키토키의 시스템 등재 누락 등 관리 미흡

○ 해·육상용 워키토키 관리실태 점검결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물품 등재는 X,XXX대인 반면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는 X,XXX대만 등록

- 최근 3년간 현장 무선통신망 장비 취득 해경청 정보통신과 통보 누락

② 해양경찰 전용 해상치안용 위키토키 현황 관리 미흡

- 해양경찰 전용 해상치안용 주파수 사용 위키토키를 확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주파수를 획득·운용¹⁾하면서 기본관리계획 부재로 위키토키 보유 및 운용대수 확인 어려움
- 특히 공공용(해상치안용) 및 업무용 위키토키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신고 대상임에도 「정보통신운용규칙」 등에 관리근거 부재

- (문제발생 원인) ① 해경청 각 과에서 별도 통신기를 구매 후 일선 할당 출급으로 정보통신 기능에서 신규 무선통신기 구입 미인지, ② 해상치안용 주파수 기본계획 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주파수 신청 후 사용
- (조치사항) ■■■■국장(○○○○과장)은 허가번호 등 필수정보가 포함되어도록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각 기능에서 사용 용도에 맞는 통신기 도입 및 행정규칙에 누락 된 해상치안용 주파수 등의 관리방안 마련(통보)

6. 해양오염사고 대응 유(油)처리제 관리체계 미흡

- (판단기준) 해양오염사고 시 유처리제는 방제작업 용이 등으로 함정·파출소에 배치, 그러나 회수기를 이용한 기계적 회수 위주의 방제작업 개선 등으로 유처리제 사용량 감소 추세, 그러나 장기보관에 따른 성능 저하 우려

※ (유처리제) 유막을 분해하여 수많은 작은 기름방울을 생성시킨 뒤 수중에서 희석·분해

- (문제점) 장기보관으로 성능변화 진행중이나 관리체계 부재
- 함정·파출소는 기관실(함정)·컨테이너(파출소) 등 온도관리가 취약한

1) 「전파법」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과기정통부 고시 제2019-99호) 및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과기정통부 훈령 제217호)에 매년 3. 31.까지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도록 규정

장소에 장기보관, 성능변화 진행중으로 확인

- 더욱이, 일부 함정·파출소는 유처리제 적정 보관방법* 및 변질 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

※ (성능검사) 유처리제 유효기간이 없어, 성능 변질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성능검사 주기마련 필요

*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 유처리제 ①최적 보관온도(-15°C~30°C)와 ②온도 변화 최소화 제시, 일부 함정·파출소는 온도 변화 심한 기관실(함정)-컨테이너(파출소) 등에 보관

- (문제발생 원인) 유처리제 적정 관리방법 숙지 미흡
- (조치사항) ㉠㉠㉠㉠㉠국장(㉠㉠㉠㉠㉠과장)은 함정·파출소에 보관 중인 유처리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권고)

7.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검사 등 관리 미흡

- (판단기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7조, 제18조 및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제2조, 제4조, 제6조 등에 “위해성 경찰장비”는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
- (문제점) ① 계측장비 미보급 등으로 안전검사(반기·연간) 실시 미흡
 - “위해성 경찰장비” 중 안전검사 시 계측 의무장비 7종에 대한 점검 결과, 최근 3년간(‘21~’23년) 안점검사 실적이 평균 XX.X%에 불과
- ② 전자충격기 등 함정 미사용 경찰장비에 대한 운용 재검토
 - 계측 의무장비 7종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사용 실적을 확인 결과, 40mm발사기(××발)와 12게이지(××발) 주로 사용, 전자충격기 등 5종은 장비노후 및 현장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사용 실적 저조
 - 특히, 전자충격기(권총형, 봉형) 제조사 대상 특성 확인 결과 봉형은 해수 노출시 사용자 감전 위험이 있고, 권총형은 진압 대상자가 해상 추락 시 감전으로 인한 익사가 우려되는 등 함정 운용 부적합

- (문제발생 원인) ❶ 안전검사 계측장비 중 방아쇠 압력 측정기가 XX개 관서에 XX대만 보급, 전자충격기 및 수압 측정 검사장비 미보유
- ❷ 전자충격기 도입 당시 함정 운용 문제점에 대한 검토 미흡 및 단정소화포 등의 장비가 노후되어 단속 현장에서 미활용
- (조치사항) ■■■■국장(■■■■과장)은 계측 의무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시 계측장비 즉시 도입 방안 마련 및 전자충격기 등 함정 현실에 맞는 진압장비 보유 기준 재검토(권고)

8. 피의자 호송계획 수립기준 및 운영 미흡

- (판단기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96.8.8.제정) 제48조 제5항 등에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호송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적절한 호송인원과 지휘·감독관을 지정 하도록 규정

- (문제점) ❶ 호송계획 미수립([별표] 참조)

- 최근 4년간('21~'24년) ☆☆지방청(호송현황 XX명/XX회) 등 XX개 관서는 호송계획 미수립으로 호송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곤란(적절한 호송관 수 지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 기록 부재)

❷ 호송계획 수립기준(시기, 내용, 표준서식 등) 미흡

- 관서별 호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기준미흡으로 상이하게 운영

■ (수립시기 상이) ★★★ 등 6개 관서는 호송시마다 계획수립, ●●해경서 등 3개 관서는 자체 판단 후 필요시에만 계획수립, ○○해경서 등 3개 관서는 연 1회 수립, ◆◆해경서는 수시(인사이동 등) 수립

※ □□부는 「■■■■직무규칙」 제40조에 매호송시 호송계획서 작성 및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수립형태 상이) ★★★ 등 11개 관서는 호송계획(내용) 공문 별도 생성, ○○해경서 등 2개 관서는 호송규칙에 없는 호송계획 부책 작성으로 계획수립 대체

■ (관련규정 미준수, 내용미흡) 호송관이 5인 이상일 때 경위 이상 1명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하나 △△해경서는 규정 미숙지로 경사 1인으로 지정(4회)하여 계획수립, ▲▲해경서 등 2개 관서는 호송관리 책임, 호송 중 유의사항만 기재하고 호송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 안됨

- (문제발생 원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호송(계획) 개념 부재,

일선 수사관의 해당 규정 미숙지 및 구체적인 수립시기·내용 미규정

- (조치사항) ▽▽국장(▼▼▼▼과장)은 호송계획 수립시기, 작성기준 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호송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권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등 13개 관서장은 호송계획 수립·시행 철저(기관주의)

9. 민간잠수사 관리위원회 미개최 등 관리 미흡

- (판단기준) ☆☆지방청 등 각 지방청은 「수상구조법」 제29조 및 제30조의12 등에 근거한 「민간잠수사 동원에 관한 가이드라인」(2017. 9. 11. 시행, ★★★★★과)에 따라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민간잠수사 관리위원회 개최 및 등록명부(관리카드) 작성·관리 필요
- (문제점) 민간잠수사 관리위원회 미개최로 등록명부 현행화 미흡
 - 각 지방청은 연 1회 이상 민간잠수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잠수사 등록명부(관리카드) 현행화 필요
 - 민간잠수사 관리위원회 미개최로 민간잠수사 등록명부(관리카드) 현행화 미흡에 대해 소관부서(수색구조과)에서도 소극적 관리
- (문제발생 원인) 담당자가 연 1회 이상 민간잠수사 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용 미숙지 등 업무 미흡
- (조치사항) ○○○○국장(●●●●과장)은 각 지방청의 민간잠수사 현행화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방안 마련(권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등 5개 지방청장은 앞으로 「민간잠수사 동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민간잠수사 관리 업무 철저(기관주의)